‘백남기 농민 사망’ 손배소 화해권고

강신명 前경찰청장 · 구은수 前서울청장 상대
법원 화해권고 확정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
살수차 조작 경찰 등 3명은 소송 계속 진행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 확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이들과의 민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다. 다만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 등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 전 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이 법원에서 권고한 화해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각각 지난 7일과 8일에 결정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밖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2016년 9월25일 숨을 거뒀다.

백씨와 가족들은 2016년 3월 “경찰이 살수차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머리에 직사 살수했다”며 국가와 경찰들을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백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소송에 이름을 함께 올렸지만 이후 사망하면서 소송 당사자에서는 빠지게 됐다.

소송은 2016년 9월말 첫 재판이 열린 후 지난해 12월까지 1년3개월여간 총 9차례 재판이 열렸다. 이후 지난달 17일 양측의 합의를 위한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성립되지 못했고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을 책임졌던 신모 총경과 살수차를 조작했던 한모 경장, 최모 경장은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대리인은 지난 10일과 13일 재판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 총경 등 3명은 백씨 유족들과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백씨 유족들의 배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청구인낙서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청구 취지가 변경됐고 이후 상황이 변하면서 사실상 현재 청구인낙서는 무효가 됐다.

청구인낙서는 서류 제출 외에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조서에 기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구 전 청장 등은 백씨의 물대포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 전 청장 측은 검찰이 현장 지휘자를 제외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만학도의 학사모 성인대상 4년제 학력인정 초등학교인 양원초교 · 양원주부학교 합동 졸업식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받고 있다.

무허가 축사 인 · 허가 유예 1년 연장

정부가 축산 농가의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유예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한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5년 3월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 적법화 절차가 3년간 유예됐던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 등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은 중규모(4년 · 2019년3월24일까지), 소규모(9년 · 2024년3월24일까지) 축산농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대규모 축사는 이번에 발표된 운영지침에 따라 내달까지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신 시 · 군 · 구 환경부서에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적법화 이행계획서(6월24일까지)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1년까지 제공한다. 지자체는 또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으로 인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반면 허가 신청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과 위탁사육자의 벌칙 특례기간은 행정처분 유예기한인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환경부는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말께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축산 정책과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축산환경관리원이 무허가축사 콜센터를 운영해 지자체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나선다.

뉴시스

“설 쇠려고” 위조지폐 사용 5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컬러복사기로 지폐 수십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 · 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집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 5만원권 20장을 위조한 뒤 지난달 5일과 이달 12일 광주 서구와 북구 전통시장 2곳에서 식품을 구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3년 전부터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생활고에 시달렸다. 명절을 쇠려고 위조지폐 14장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전처 흉기로 찌른 뒤 음독 60대 검거

순천경찰서는 22일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8분께 전처인 B(60)씨가 운영하는 순천시 모 식당에서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입구 쪽에서 TV를 보고 있던 B씨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식당 인근 모텔에서 농약을 마셨으며, 오후 8시45분께 모텔 주인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말레이시아인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국내로 입국해 범행을 벌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현금 수거책인 말레이시아인 A(24 · 여)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현금 인출책 장모(27)씨와 대포통장 운반책 중국인 C(2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검사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전화에 속은 11명으로부터 모두 884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장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BMW를 구매해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면서 “A · C씨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절도로 붙잡힌 20대, 유치장 앞서 자해소동

유치장에 입감 대기중이던 20대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유치장에서는 지난해에도 50대 남성이 목을 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부실한 유치장 관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 10분께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대기중이던 김모(29)씨가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근무자가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울산 동부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이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에 입감 대기 중이었다.

김씨는 유치장 입감 직전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위로 자신의 목을 한차례 찔렀다.

경찰은 김씨의 흉기 소지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호송한 형사들과 유치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호송 절차나 유치장 입감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 유치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50대 피의자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허술한 관리로 유치장 근무자들이 30여 분간 사고를 눈치 채지 못해 관련자 5명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뉴시스